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
----------	----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정청래 · 강준현 · 한민수
양문석 · 정진욱 · 김병주
임오경 · 김동아 · 이원택
신영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음.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정보도·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3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를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게재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도된 언론보도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

-----있으며,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p>되어야 <u>한다</u>.</p> <p>③・④ (생략)</p> <p>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하고,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게재되어야 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u></p> <p><u>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	--